

2016년 도쿄올림픽의 좌절과 도시의 정치경제*

The Setback of Tokyo bid for the 2016 Summer Olympics
and the Urban Political Economy

김은혜**

이 연구는 도시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2016년 도쿄올림픽의 유치활동이 좌절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세계도시’를 표방하는 도쿄 도정은 올림픽 유치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성숙도시’ 만들기를 표방했다. ‘환경·컴팩트·재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1조 엔 도시재개발을 계획했으나, 사회통합적인 도시재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치활동은 도시 경쟁력과 23구 중심의 도심회귀만을 강조하면서, 공간적 양극화를 정당화했다. 도쿄 도가 과거 성장시대의 이익유도형 정치인 ‘성장연합’을 구성했다면, 저성장시대의 생활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는 ‘이벤트연합’으로 대항해 나갔다. 올림픽 슬로건과 달리 유치활동과 계획은 매립지의 오염·안정성 문제를, 시설비의 증가를, 그리고 과다지출을 드러내었다.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부흥’을 이념으로, 도쿄 도는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재도전을 표명했다. 21세기 도시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메가이벤트가 세계도시지역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망해 본다.

주요어: 올림픽 도시, 세계도시, 도시재생, 성장연합, 이벤트연합

*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0년 대학원생 일본현지 자료조사(지원금)’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ISA-RC21 Tokyo Conference(2008년 12월 18일)’와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스에히로 아키라(末廣昭) 세미나’(2011년 5월 25일) 발표문을 수정·보완했다.

**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 전공: 도시·문화사회학)(E-mail: wblake@naver.com)

1. 저성장시대,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

2006년 8월 일본 국내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들 간의 경쟁에서 도쿄도(東京都)가 승리했다. 국내 유치 경쟁에서 최후 경쟁자로서 ‘휴먼 스케일’을 지향한 지방도시 후쿠오카 시(福岡市)를 제치고, ‘그린·컴팩트 올림픽(Green·Compact Olympics)’을 내세운 도쿄가 지지를 얻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와 ‘10년 후 도쿄’ 정책과는 정책을 연계해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2009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총회 제2차 투표에서 낙선하면서 도쿄 유치의 꿈은 좌절되게 되었다.

21세기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의 도쿄가 2016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일본의 수도, 세계도시 도쿄가 2016년 올림픽을 둘러싼 개발계획의 실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올림픽을 추동해 갔던 세력과 반대했던 시민사회는 어떤 쟁점들에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른바 제도화된 ‘메가이벤트들(mega-events)’¹⁾ 가운데, 올림픽은 ‘국가 간 체육제전’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유치 주체는 ‘도시단위’로 진행되는 이벤트이다. 이처럼 ‘올림픽 개최도시’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볼 때, 실제 올림픽 유치와 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은 외부에서 촉발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듯이 장기적인 저성장시대를 경험해 온 일본 지자체들이 어떤 슬로건과 계획으로 유치경쟁에 참여했는지 살펴해보도록 한다. 유치경쟁의 마지막 경쟁자 2도시(세계도시 도쿄도 vs 휴먼스케일을 지향한 후쿠오카시)의 경쟁구도를 비교해 본다. 일본은 고도성장 시대에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수도권 분산형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1) 근대사회의 거대한 퍼레이드와 쇼를 메가이벤트라고 지칭한다. 거대한 규모의 문화적(상업적/스포츠 포함) 이벤트로 드라마틱한 성격과 대규모의 대중적 소구력, 그리고 국제적 중요성을 갖는 이벤트로 이른바 ‘공식적’ 버전을 가진다. 목표의 범위에 따라 구분(mega-special-hallmark-community event)되며, 엑스포, 올림픽, 월드컵(축구) 등이 포함된다(Roche, 2000: 1~4).

버블경제 이후 저성장시대에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조금씩 변화되었고,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도심회귀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도쿄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거대도시의 논리가 올림픽 유치에 추동해 가면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도시로 나아갈 기회로 올림픽 유치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IOC 권고사항인 ‘시설집중’과 ‘올림픽 유산(건축·시설)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거대도시의 도심재개발과 친화력을 갖게 되었다.

과거 1964년 도쿄올림픽이 전후 국제사회에 재등장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고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2016년 올림픽 유치활동은 ‘환경·콤팩트·건전재정(Green·Compact·finance)’을 내세우며 ‘성숙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치중심지는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지였던 요요기(代々木) 주변 활용을 계획했다. 그러나 국유지와 올림픽 기준 부적합 등으로 난항을 겪어 도쿄만 워터프런트개발지인 ‘임해부도심(臨海副都心)’으로 변경되었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이 상징하듯이, ‘개발 vs 생활’이라는 대립축을 ‘중앙정부-도쿄 도’, ‘도의회’ 내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당 중앙정부는 올림픽 재정보증은 큰 틀에서 협력하나, 도의회에서는 환경·복지문제를 도외시하는 도쿄 도의 올림픽 계획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2016년 올림픽 유치활동이 ‘공공사업-지가 상승-내수확대’라는 과거 개발주의의 3단 논법을 반복했다면, 시민모임인 ‘도쿄에 올림픽은 필요 없다 네트(東京に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ネット)’는 도민들의 ‘복지·안전’을 우선시할 것으로 주장하며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어 연대해 나갔다. 즉, 도쿄 도가 과거 성장시대의 이익유도형 정치인 ‘성장연합’을 구성했다면, 저성장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사회는 수평적 네트워킹인 ‘이벤트연합’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좌절 이후에도 올림픽 유치의 재도전을 표명하는 가운데 전대미문의 재해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고, ‘2020년 부흥올림픽’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쿄 도는 재유치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일본의 복구 움직임은 동북아 대도시권역 간의 네트워

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워터프런트 개발 ‘한강 르네상스’, 메가이벤트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도 시사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한다.

2. 21세기 올림픽과 도시정치경제: 올림픽 도시와 도쿄올림픽(들)

올림픽(개최)도시[Olympic(host) Cities], 여기서는 후보도시(Candidate City)라는 분석단위로 한다. 세계도시들이 최근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가, 올림픽 계획과 도시재생이 어떻게 친화력을 갖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도시행위자들이 어떤 대립축을 구축했는가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자.

1) 세계도시·메가이벤트·도시재생: 성장연합 vs 이벤트연합

전전에는 올림픽이 전쟁과 나치즘을 위한 선전무대로 얼룩졌다면, 전 후에는 신흥산업국의 내셔널리즘이나 경제성장을 과시하는 무대로 거대화되어갔다. 1960년 로마대회 이후에는 선진국 그룹 진입기념 이벤트로서 국가의 ‘수도’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었다(町村敬志, 2007).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재정적자 이후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한때 개최 반납 사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산물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1984년 미국LA올림픽 이후 TV방영권과 결합된 ‘스포츠 쇼’로 전환되어갔다. 이제 올림픽은 ‘재정적 짐’이 아니라, ‘득을 보는’ 메가이벤트로서, 선진국 광역권 중심도시들이 유치경쟁에 합류하는 치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처럼 자국의 경제성장 단계가 선진국 그룹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국책 이벤트’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일정한 도시 경제력을 갖춘 이른바 ‘세계도시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사례들도 있다(2012년

런던올림픽). 이처럼 ‘도시경쟁력’을 증명하는 새로운 장으로서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도시 개발주의와 매우 친화력을 갖게 된 것이다.

세계도시(global city)는 전자통신이 구비된 오피스 환경과 도심회귀의 분위기, 그리고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국제 항공들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생산자서비스들의 집적이 장소적 이익을 유도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복합체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Sassen, 2001). 그러나 세계도시들의 경제구조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라는 높은 위험성과 사회적 격차를 안고 있고, 공간적 양극화의 형태로 다양한 갈등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듯 세계도시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스포츠 시설들의 건설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인프라에 대한 재건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Preuss, 2004: 93~94). 갈등하는 정치적 힘들을 통합하고, 고용창출과 도시재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한 세계도시들이 적극적으로 메가이벤트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올림픽 유치경쟁은 최종투표에서 탈락한 프랑스 파리나 9·11사건을 어필했던 미국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들이 참여했다.

보통 한 도시의 물리적 특성은 1년에 1%도 바꾸기 어렵지만, 올림픽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변화를 가능케 한다. 즉, 올림픽이 영향을 미치는 도시재개발의 범위는 크게 1차 구조로 스포츠-레저, 2차 구조로 주택과 여가활용, 3차 구조로 고용과 교통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소요 비용 역시 크게 시설정비비와 대회운영비로 나뉜다. 문제는 대회운영비가 흑자라고 하더라도, 시설정비비는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막대한 영향력과 비용을 요하는 메가이벤트로서 올림픽은 단기간의 엄청난 집증을 필요로 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단기간의 경기운영에 비해 많은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사용하지 않은 거대한 시설들이 남는다는 맹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정의 압력과 특수한 올림픽 규격에 의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해당 도시의 재개발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도시계획의 문제를 초래

하는 측면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Preuss, 2004: 72~80).

따라서 과거 올림픽이 대규모의 물리적 도시계획을 통해 단기간에 도시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를 건설하는데 치중했던 반면(예컨대, 1964년 도쿄, 1988년 서울), 최근 올림픽은 재정, 장소관측, 안전, 도시재생, 관광 등의 도시 관리적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Coaffee, 2011: 143~147). 범죄 감소와 환경문제 등처럼 ‘총체적 국가 개입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이며(1992년 바르셀로나, 2008년 베이징, 2016년 런던²⁾ 등), 도시문제(주택수요)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의 발전 방향 설정과 커뮤니티 응집 등 이른바 보다 사회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정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개최도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커다란 재정적 문제를 올림픽들 개최도시들(뉴욕, 솔트레이크, 아테네, 바르셀로나, 런던 등)에서 일으켰다(Lenskyj, 2008).³⁾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재개발을 위해 ‘성장연합(growth coalition)’(Logan & Molotch, 1987; 2007)이 구성된다면, 시민사회 역시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하는 ‘이벤트연합(event coalition)’(Boykoff, 2011: 45~47)을 구성해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⁴⁾ 올림픽 유치활동이 과련 기구들과 많은 자본들의 참여로 ‘제도화-상업화’되었다면, 올림픽반대운동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수평적인 조직’을 통해 전개되어 나간다. 이벤트연합은 동질성을 강요하거나 지속성을 과장하는 ‘사회운동’보다는,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둘러싼 일종의 ‘운동의 융합(a convergence of movements)’으로 보았다.

2) 2012년 런던올림픽은 런던 동부의 시장주도적 워터프런트 재개발의 상징이었던 도크랜드에 관련 시설들이 건설되었다(윤일성, 1997).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재개발이 촉진되었으나, 올림픽 ‘주택유산들(housing legacy)’ 중에서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Bernstock, 2009: 211).

3)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적자설(IOC는 부정하고 있으나)처럼 ‘올림픽선수촌(The Village on False Creek)’은 분양율도 저조했다.

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비정부단체의 특성과 메타포를 보전연합체(‘안정/민생’)와 개발연합체(‘경제발전/지역개발’)로 유사하게 구분한 다음 논문(서세훈 외, 2010: 491)을 참조.

유연성과 자발성, 그리고 수평적인 연대감으로 조직되며, 탈중심적이고, 비위계적이며, 반권위주의적인 동맹인 ‘올림픽저항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해 나가는 특성을 갖는다.⁵⁾ 더욱이 도시공간에서 스펙터클(spectacle)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메가이벤트나 도시관광이 도시문제들을 감추는 등 일종의 정치적 통합을 형성한다고 기대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그동안 감춰져 왔던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대립(인종, 계급, 젠더, 지배-구속)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반론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Gotham, 2011).

2) 도쿄의 올림픽(들): 고도성장기(1964년)와 저성장기(2016)

2005년 9월 이시하라 도지사가 올림픽 유치를 처음 표명했고, 2006년 3월 도쿄 도의회는 유치를 결의하였다. 2006년 2월 도쿄 도가 발표한 유식자간담회의 결과를 정리한 짧은 보고서 「도쿄올림픽의 실현을 향해서 (2006년)」를 주목해 보자(<인용 1>).

“<인용 1> 도시의 성쇠가 국가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도시의 힘이야말로 확실히 국력이다. 이 나라에 있어서 국가를 건인하고 일본의 존재를 상징하는 도시는 도쿄이다 ...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쿄의 재생, 나아가서는 일본재생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패전 후 불과 19년 만에 전후의 황폐함을 극복한 일본이 세계무대에 재등장한 순간으로 규정했다. 당시 도시 건설의 속도와 투자된 굉장한 에너지는 현재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 중

5) 2010 밴쿠버올림픽에 대한 반올림픽운동은 단지 ‘투덜대는 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의 실체(표면적으로만 윈윈게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장기적인 공적 교육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Boykoff, 2011: 46 재인용). ‘이벤트연합’이라는 개념은 자세한 내용과 논쟁은 다음 논문(Tarrow, 2005; Donatella & Tarrow, 2005)을 각각 참조.

하나로 규정했다. 국민 공통의 큰 목표를 잃어버린 일본인은 (탁월한 기술력과 감성에 불구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올림픽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족(太陽族: 유한계급 불량소년)’의 유행을 선도했던 청년소설가 이시하라는 외국인·여성 폄하 발언 등을 일삼는 보수·우익이라 비판을 받으면서도, 1999년부터 2014년까지(제4기, 12년) 연임하고 있는 인기 있는 정치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후 고도성장시대를 대표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이시하라 도지사가 일본인들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해, 올림픽을 ‘경제회생’의 논리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림픽유치위원회 이사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는 “장기계획과 올림픽과의 관계는 1964년과 같은 인프라정비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치우쳐 비대화된 도시를 억제하고 환경이라는 종합적 시점에서 재편성해 가는 도시로서의 ‘성숙’이다”라며 공감을 표했다(安藤忠雄, 2007).

실제로 1964년 올림픽 당시 정부와 도쿄 도의 막대한 재정이 공공 교통[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과 상하수도 등에 투입되어 도쿄는 이른바 ‘근대 도쿄(modern Tokyo)’로 거듭나게 되었다. 당시 급증하는 자동차수로 인한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1959년에는 ‘수도고속도로공단’이 설립되어 수도권의 도로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전전-공습피해-GHQ-1964년 올림픽-2000년’이라는 일본정치와 중요한 시점별로 올림픽 시설 및 부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전전의 군사시설들 대부분을 GHQ가 접수해, 1964년 올림픽의 재개발을 계기로 도쿄의 도심 공간이 비로소 ‘일본인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요요기(代々木) 주변은 전전(戰前) 요요기연병장(練兵場)에서 전후(戰後) ‘미군숙소(Washington Heights)’로, 그리고 고도성장기는 ‘올림픽선수촌’으로 변화되었다.⁶⁾ 전후 일본은 정치[안보투쟁(1960년)에서 경제(도쿄올림픽(1964년)]로 사회의 중심점이 급격히 이동했다. 즉, 일본 고도성장기에 축적된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가져온 소

6) <표 3> 도쿄올림픽(1964년)에 경기장·연습장·관련 시설의 토지이용변천을 참고(町村敬志, 2007).

비대중사회로의 진입에 적합한 ‘수도 도쿄’를 건설해 왔던 것이다.⁷⁾

1964년 도쿄올림픽은 고도경제성장기에 국가 주도로 설비투자를 수도권 도쿄에 집중시킨 ‘국민국가의 수도만들기’였다면, 2016년의 유치활동은 도쿄 도가 ‘도쿄경쟁력=일본경쟁력’ 논리를 확대시킨 과정이었다. 1950~1960년대 고도성장기와 1970년대 혁신자치체(civil minimum)의 시기에는 ‘수도권 성장’과 ‘지방의 시대’라는 레토릭이 동시에 작동했다(이지원, 1999). 그러나 이미 건설된 지 30여 년이 지난 도쿄의 도시인프라가 쇠퇴되어 감에 따라, 도쿄의 재정비를 위해 도시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갔다. 새로운 다목적고층빌딩군의 건설이 증가하는 등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은 1980년대에 들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도쿄 도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높은 지가와 높은 임대료와 함께 장시간 통근시간에 시달리고, 환경파괴와 녹지부족 등 ‘거주환경(livability)’의 붕괴였다(加茂利男, 2005: 71~78).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의 양면성이야말로 세계도시 도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이었다(八田達夫編, 2006).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장기화된 저성장시대에 보수-중도파가 지배적 정치적 성향으로 굳어져 갔다.

1999년 선거에 승리한 이시하라 도지사(자민당 추천)는 집권 후 바로 ‘세계도시’ 전략을 부활시키고,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속속 추진해 나갔다(町村敬志, 2006). 2000년에 책정된 「도쿄구상 2000: 천객만래(千客万來)의 세계도시를 목표로(2001~2015년)」라는 보고서에서는 “수도에 걸맞은 도쿄는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고도의 도시기능이 계속 활발히 집적하고 도시 간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본경제를 강하게 견인하는 세계에 으뜸가는 국제도시이자, 세계 속의 사람, 물건, 정보 등이 오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재차 내걸었다. 도쿄가 북미나 서구 선진국들의 여러 도시들과 성장하는 아시아의 도시들과도

7) 사회경제사적인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테마송, 도심공간, 소비미덕, 주택문제, 교육(진학문제), 신칸센, 여가문화(쇼난湘南·박람회·유원지), 유통 등]은 필자의 서평을 참고(김은혜, 2011).

한층 격화된 경쟁관계에 놓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국제공항(하네다공항) 기능의 강조나 IT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도시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른바 ‘도쿄중심주의’가 이시하라 도정의 특징으로 굳어져 갔다.

이렇듯 2016년 올림픽 유치계획은 ‘성숙도시 도쿄’를 지향하면서 ‘환경-콤팩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는 IOC권고사항은 환경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올림픽 유산(Legacy)의 활용가능성에 맞춰나갔지만, 실제로 유치계획은 도시재개발과 상업주의가 중심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 그룹들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나가노 현(長野縣)과 유치경쟁지였던 후쿠오카 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미국 시카고 시 등과도 연대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더구나 유치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올림픽 관련 시설들이 1/2가량 들어서게 될 고토 구(江東區)의 지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도쿄 도와 고토 구가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총련계의 작은 민족학교[에다가와(枝川)]를 ‘공유지 불법점거(squatter)’로 규정해, 토지 소유권 재판을 일으키기도 했다.⁸⁾ 이처럼 유치계획 전반이 신자유주의적인 도시정부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도심공간’의 이해만을 실현하려는 매우 사회 배제적인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 도심회귀와 유치 계획

2016년 올림픽 일본 내 최종 유치경쟁지였던 후쿠오카와 도쿄 도의 계획을 비교하고, 도쿄 도 올림픽 유치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⁹⁾

8) 도쿄 도-조선학교 재판 전후과정은 각기 <SBS스페셜 1: 나는 가요-도쿄, 제2의 여름학교>(2006년 9월 11일 방영), <SBS스페셜 1: 도쿄, 제2학교의 봄>(2007년 4월 29일 방영)에 담겨 있으며, 재판을 둘러싼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줄고(김은혜, 2010)를 참고.

1) 일본 내 유치경쟁: 도심회귀와 권한이양의 문제

국내 입후보지 경쟁은 초반 삿포로(札幌),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 등 혼전 양상을 보였다. 지자체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다가 2005년 가을에 도쿄 도가 가세했다. 이에 경쟁구도는 ‘지방도시 후쿠오카 대 거대도시 도쿄’로 좁혀지게 되었다. 야마사키(山崎廣太郎) 후쿠오카 시장은 1/3 정도를 후쿠오카시권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후쿠오카·큐슈 올림픽’을 주장했다. 지중해 항만도시 ‘바르셀로나’처럼, 일본해 항만도시 후쿠오카는 ‘휴먼 스케일(human scale)’ 올림픽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림픽 계획의 중심 내용은 스자키(須崎) 부두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후쿠오카의 ‘신도심구상(新都心構想)’ 계획의 일환이었다. 당시 이 계획은 전체 401ha 중에서 53%정도가 준공되었으나 광대한 토지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¹⁰⁾

후쿠오카 시는 올림픽 관련 정비에 4,864억 엔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는 1,000억 엔 이하 올림픽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 대안으로 국내 대기업이나 한국·중국 등 해외의 ‘민간자본’을 활용해 올림픽 관련시설들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해 나갔다(フォーラム福岡, 2006). 그러나 일본 총무성의 추산에 의하면, 후쿠오카시의 ‘실질공채비율’¹¹⁾이

9) 일본이 올림픽에 입후보한 총 횟수는 하계올림픽 6번, 동계 4번이었다. 하계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인해 철회된 1940년대 도쿄올림픽을 제외하면)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1988년 나고야, 2008년 오사카, 2016년 도쿄가 각각 실패했고, 현재 도쿄 도가 2020년 올림픽 유치활동을 재가동해 총 6번째 하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1972년 삿포로, 1998년 나가노로 2회 성공했고, 삿포로가 1968년, 1984년 각기 2회 좌절했다.

10) 관련 쟁점은 다음 기사를 참고(“どうなる須崎再開発福岡市五輪落選のその後,” <西日本新聞(朝刊)>, 2006년 9월 3일).

11) 자치체의 재정규모 중 실질적인 빚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반체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체재정건전화법」에 의해 재정의 건전도를 진단하는 4가지 지표들(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장래 부담비율) 중의 하나로, 25%를 넘으면 조기의 건전화를 요청할 수 있다(일본 총무성 URL <http://www.soumu.go.jp/iken/zaisei/bunsekihyo.html>).

22.8%로, 정령시(政令指定都市) 중에서 최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는 ‘후쿠오카 올림픽 유치에 반대하는 모임(福岡オリンピック招致に反対する會)’을 결성해, 유치반대의견을 올림픽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반대운동은 유치반대서명운동에서 후쿠오카 시민의 약 10% 약 13만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내었고, 결국 올림픽 계획을 추진했던 아마자키 시장은 이후 2006년 11월 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었다.¹²⁾

반면, 도쿄 도는 2006년 3월 ‘도쿄 도의회’에서도 올림픽유치결의를 채택해 4월 유치본부를 발족해, 수용력이나 기능의 충족도, 국제이벤트의 개최실적 등을 고려하면 도쿄 외에는 감당할 개최도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거대도시 도쿄를 재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1조 엔 올림픽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쟁의 초반부터 강력한 재정력을 강조해 나갔다. 일본올림픽유치위원회(JOC: The Japanese Olympic Committee)는 열악한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용지취득의 난항 등 후쿠오카 시의 개최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2006년 8월 일본 국내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JOC는 국내 개최도시로서 도쿄를 선정하게 되었다. 도쿄 도는 2006년 12월 22일 ‘10년 후 도쿄: 도쿄가 변한다(10年後東京: 東京が変わる)’라는 계획에서 ‘도쿄의 매력을 세계로 발신’, ‘관광자원의 개발’, ‘수용체제의 정비’ 등으로 구성된 10개년 계획이 2016년 올림픽과 연계되어 도정목표의 핵심이 되었다(東京都, 2007: 11).

더구나 올림픽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한 예비이벤트로서 도쿄 도는 2007년 2월 ‘제1회 도쿄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도쿄 도와 일본육상경기연맹은 2005년 10월 20일 기록향상과 도내관광명소 소개를 결합시키기 위해 ‘도쿄 도청(시작)~빅사이트(결승) 코스’를 합의했다. 황거앞(皇居前), 츠키지(築地), 아사쿠사(淺草), 도쿄역(東京驛), 긴자(銀座) 등 도심의 관광거점을 지나면서, 에도(江戸)·시타마치(下町) 등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도

12) 日本共産党福岡市議団特集福岡オリンピック招致
<http://www.jcp-fukuoka.jp/special/olympic/index.html>.

쿄의 매력을 활용하도록 주요 통과 포인트를 설정했다고 한다. 물론 기존 시민중심 마라톤의 의미를 훼손했으며, 도쿄 도의 재정 부담(지자체장들과 마라토너 비용)을 가중시킨다는 재정에 대한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도로 응원 장소에서는 노점, 엑스포, 축제 등을 병행하고, 10km 지점(日比谷公園) 통과 기념표창식 등 많은 이벤트를 결합시키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東京都, 2008: 137).

그렇다면 여기서 ‘도심회귀(gentrification)’와 관련해 도쿄마라톤의 인기의 실체에 대해 재고해 보자. 1950년대 고도성장이 시작된 이래 도쿄로의 전입인구는 계속 증가해 항상 과밀한 상태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정비법」(1956년) 등 지속적으로 분산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직장과 주거의 균형을 맞추는 ‘다심형도시구조[副도심과 타마(多摩)지구]’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갔다.¹³⁾ 1980년대 이후 ‘지식-서비스경제’로 이행하면서 도심의 주간인구 증가 폭은 잠시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도시권 중심도시에 지속적인 인구증가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도심부의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米山秀隆, 2002). 이제는 도심에 업무 이외의 주거, 문화 등을 확충하자는 주장은 널리 공감을 얻게 되었고, 고차도시기능의 집적에 기초한 도심주거의 장점이 강조되게 되었다(川相典雄, 2005). 국토교통성은 제5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 「도쿄권 혁신프로그램(1999년)」을 책정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년)으로 수상이 본부장이 되는 ‘도시재생기구’가 설립되게 되었다.

실제로 2005년 3월 7일 도쿄 도가 2005년 1월에 도심에서 착공했던 ‘신설주택의 착공상황’ 발표를 보면, 도심3구의 착공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67.8%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도심회귀가 실질 거주 수요와 함께 투자용맨션 등에 대한 수요도 역시 동반해서 증가시키고 있음을 예상

13) 수도권정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도권’이란 도쿄 도의 구역 및 정령으로 정해진 주변지역 일체로 한 광역을 의미한다. 도쿄권은 1도 근린 3현을, 수도권은 주변 4현을 더해 1도 7현을, ‘도쿄의 도심’은 23구를 의미한다(도심 3구, 도심 5구로 구분).

케 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도쿄 23구에 대한 GIS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건물들의 해체와 함께, 신규 건물들의 대형화와 고밀도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田中耕市, 2008).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도권 재생긴급 5개년 10조 엔 프로젝트」가 책정되어, 「도시만들기비전(都市づくりビジョン)」도 공표되었다. 전국 거대도시권과 도심형 도시재생이 추진되면서, 규제완화와 특별교부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지구’를 지정, 사업의 신속성을 기하는 프로젝트들이 가동되었다(박세훈, 2004). 현재 일본에서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로 대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65개 지역(약 6,612ha)이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현재 6차 지정)’으로 선정, 진행되고 있다.¹⁴⁾

문제는 이러한 도심회귀의 경향이 실질적으로 적합한 주거환경의 확보로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점일 것이다. 과거 ‘지자체 권한이양’이 현지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도시정책에 반영하지는 반성적 성격을 지녔다면, 최근 도쿄 도처럼 대도시권이 주도하는 논리는 오히려 중앙-지방의 공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당선 초기부터 이시하라 도지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권한이양은 ‘중앙(수도권 경쟁력·도심회귀)-지방(재정파탄·유바리(夕張)쇼크¹⁵⁾)’라는 공간적 양극화 구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町村敬志·平山洋介, 2009: 111). 도쿄의 23구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교외지역인 ‘타마지역 의회와 시민들 모임(みどり三多摩)’은 경제성장형 올림픽 계획에 대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역행하는 ‘개발낭비형·툽다운’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올림픽경기 일부를 타마지역에도 개최해야 한다며, 도내의 미즈호초의회(瑞穂町議會)에서는 올림픽유치결의를 부결하기도 했다.¹⁶⁾ 이

14)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적용상황’은 다음을 참고.

<http://www.toshisaisei.go.jp/04troushi/01.html>.

15) 탄광도시 유바라 시는 1990년 폐광 이후 메론, 영화제, 석탄박물관 등 내발적 발전 모델로 주목을 받았었다. 2006년 심각한 재정난으로 결국 2007년 3월 6일을 기해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후 일본에서는 ‘재정파탄 도미노’라 일컬어질 정도로 전국적으로 일본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처럼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은 ‘도쿄중심·도심중심적 도시재생’을 위한 명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도쿄 도 재정은 2009년도 예산에서 도 전체로는 7,520억 엔(13.6%)로 과거최대의 감소액을 보였다. 도쿄 도 세입의 중심인 도세수입은 경기 동향에 영향 받기 쉬운 ‘법인2세(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의 비율이 높아, 과거 3년간 1조 엔 정도가 감소했다. 이는 ‘지방법인 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이하 잠정조치)’¹⁷⁾의 영향으로 법인2세가 전년도에 비해 7,743억 엔(30.3%)이나 감소한 것이다. 2009년도에는 법인사업세가 2,691억 엔이 감소했으나, ‘지방법인특별양여세’ 1,005억 엔이 중앙정부로부터 양여되었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금액은 1,686억 엔이었다(東京都財務局, 2009: 4).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는 2007년 12월 11일 후쿠다(福田康夫) 총리와 이시하라 도지사의 합의가 존재한다.¹⁸⁾ 더구나 이 합의는 재정력을 가진 4곳의 거대도시권[도쿄 도,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오사카부(大阪府), 아이치현(愛知縣)]의 반대 연명을 낸 직후에 이루어졌다. 즉, 도쿄 도가 법인2세의 증가분을 중앙정부에 양여하는 대신, 도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일종의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교환’이었다.¹⁹⁾

16) “經濟効果4兆円: 東京オリンピック招致 都が試算—多摩地区市議ら招致反対運動23日 立川で”, 《日本經濟新聞》, 2006.07.21.

17) 2008년 세제개정은 소비세를 포함한 세 체계의 발본적 개혁이 시행되기까지 잠정조치로, 지역 간 세원의 편재를 시정하고자 법인사업세의 일부를 분리해서 지방법인특별세(창설, 국세로 환원분) 및 지방법인특별양여세(창설, 국가가 도도부현에 재분배)를 창설했다.

東京都主税局 <http://www.tax.metro.tokyo.jp/tax-info/bessi.pdf#search=‘法人稅暫定措置’>, 검색일: 2011년 6월 25일.

18) 도의 지방세 중 3천억 엔 정도를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들에 돌려주는 대신, 도쿄 도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13항목(하네다공항 국제선 발착범위의 확대와 취항 거리의 연장, 도쿄 외곽 환상도로의 조기착공, 2016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전면적 지원 등)의 협의시책을 제시했다(皆川健一, 2008).

19) “法人事業稅のうち3千億円の地方移讓, 都知事応じる…首相と會談, 暫定的に,” 《讀賣新聞》, 2007년 12월 11일.

2) 2016년 도쿄올림픽 개최 계획: 환경·콤팩트올림픽?

유치초반이었던 2005년 도쿄 도는 요요기공원과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주변에 대규모의 재개발 계획을 내세웠다. 이 계획의 요점은 1964년 올림픽 시설인 국립가스미가오카(霞ヶ丘) 육상경기장을 대규모로 개·증축하고, 메이지신궁 주변에 국제올림픽동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유지(國有地)였던 메이지신궁 주변에 대한 용지취득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경기 단체와 관계자들도 올림픽 경기의 표준과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2006년 5월 ‘2016년 도쿄올림픽기본방침’에서 도유지(都有地)인 임해부도심²⁰⁾에 츠키지-미디어센터, 하루미(中央區・晴海)-주경기장, 아리아케(有明)-선수촌으로 구성된 클러스터(cluster) 건립 등을 골자로 한 ‘개최중심지 변경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실제로 어떤 시설계획이었던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자. 2009년 2월 12일 IOC에 입후보과일을 제출하였고, 4월 IOC평가위원회가 도쿄를 시찰했으며, 6월 ‘IOC개최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IOC신청과일 『TOKYO 2016 Applicant City』에는 경기회장을 ‘콤팩트’와 ‘환경을 배려’하면서 건립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지도 1>). 올림픽 회장은 크게 ‘헤리티지 존(Heritage Zone: 1964년 올림픽 유산)’과 ‘도쿄베이 존(Tokyo Bay Zone: 2016년 올림픽 핵심 시설들)’ 등 크게 4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었다. 이는 당시 유력한 입후보지였던 미국 시카고가 계획한 반경 10km 올림픽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축소된 8km로 도쿄 도의 계획은 더욱 수정된 것이었다.

올림픽이 가져올 도쿄의 미래상에 대해서 “고기능성, 안전, 환경, 잠재력 향상, 성숙사회의 품격으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도시”를 제안하

20) 공식 애칭은 ‘레인보우 타운(Rainbow Town)’이지만, 페리함대의 개항 위협에 대한 방위를 위해 에도막부(江戸幕府)가 건설한 해상 포대가 일부 남아 있어 흔히 ‘오다이마(お台場)’로 불린다. 도쿄 도 7번째 부도심으로 규모 442ha의 광대한 도쿄만 매립지, 도쿄 도 도시정비국과 항만국이 계획·관리한다(平本一雄, 2010).

<지도 1> 도쿄 올림픽 개최 계획도



출처: 『2016도쿄올림픽입후보파일(2009년 2월 13일)』, 128쪽, 팸플릿 3쪽 재구성.

고 있다. ‘도쿄의 저력’으로 제시된 측면들은 ① 도시기능의 고밀도 집중·집적, ② 도쿄로 표상되는 일본문화의 힘, ③ 개최도시의 재정이었는 데, 이는 이후 2007년 12월 「10년 후 도쿄 도 실행프로그램 2008」에서 도쿄의 환상도로네트워크 정비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도쿄 도는 장점으로 ‘유산(heritage) 활용·집중조성(cluster)·비용절감(cost-down)’을 전면내세웠다. 과거 1964년 올림픽 시설인 요요기 경기장 주변을 활용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해 각 시설들을 집중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변경된 계획이 더욱 콤팩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지 변경으로 신설될 시설들이 많아 비용이 378억 엔으로 증가되었을 뿐더러, 시설도 도심 전역으로 분산되고 말아 실질적으로 그다지 집중된 경기시설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환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도쿄 도는 ‘카본마이너스올림픽(Carbon Minus Olympics)’이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대회 개최를 계기로 도입해 촉진하게 될 이산화탄소 배출삭감대책에 의해, 삭감효과양이 많은 올림픽경기대회를 지양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폐기물계 바이오매스(biomass) 연료 등 클린에너지를 이용해, 10만 명 수용 규모의 올림픽주경기장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 패널의 탑재를 모색한다고 했다. 선수촌도 목재를 이용해 옥상과 벽면을 녹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약하는 등 신설 경기시설 중 5곳은 이후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本部, 2010: 578). 예컨대, ‘바다의 숲(海の森, Sea Forrest) 프로젝트’는 쓰레기와 잔토로 매립된 도쿄만 최남단인 ‘중앙방파제 내측처분장’에 높이 30m의 나무를 심어 숲으로 변경하고자 했다. 도쿄 도심의 CO₂ 흡수율을 높이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을 표방하는 녹화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16년 완성을 목표로 조성금 모금도 진행되고 있다.²¹⁾

이렇게 친환경적인 표현으로 채워진 계획이었으나, 새 개최중심지가 된 ‘임해부도심(도쿄베이존)’은 과거 공업지대와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던 지역이다.²²⁾ 세계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85년을 시작으로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약 30여 년간 개발-중지-개발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버블시대에 텔레포트(Teleport)를 건설해 ‘미래도시’를 만들자는 장밋빛 계획으로 출발했으나,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도시박람회 개최마저 취소되었다(砂原庸介, 2009). 그러나 개발 규모는 축소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개발담당 제3섹터가 재정과탄을 맞는 등 여전히 ‘적자’인 지역이다. 더욱이 임해부도심의 지반은 액상화(液狀化, liquefaction) 현상²³⁾의 위

21) 1,230만 쓰레기로 조성된 매립지(87.9ha로 히비야 공원의 약 5.5배)로 1973~1987년에 걸쳐 리사이클 토양과 건설발생토양 등이 표면층을 형성하고 있다(東京都港湾審議會, 2005).

22) 올림픽이 환경문제에 대한 이념과 비전보다는, 개발주의가 동력이 되곤 한다는 비판은 다음(남상우, 2007: 142)을 참고.

험성이 상당한 높은 ‘매립지’이다(東京都防災會議地震部會, 2006: 4). 지진·쓰나미 등이 발생할 경우, 대비가능한 수용인원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거센 비판도 일었다.²⁴⁾ 주경기장(10만+2만) 건설이 예정되었던 ‘하루미 지구’는 여전히 도쿄 도에 재정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 요컨대, ‘수변공간’의 개발의 일환(片木篤, 2010)이자, 도쿄 도의 채무처리(三島富茂, 2009)를 위한 도시재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는 비판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4. 2016 도쿄올림픽 유치 좌절: 쟁점들과 남겨진 문제들

도쿄 도가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부딪혔던 재정·조직의 문제와 올림픽 반대운동, 그리고 유치 좌절 이후에 남겨진 문제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1) 유치의 쟁점들: 성장연합 vs 이벤트연합

IOC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최 도시를 넘어서 중앙 정부의 재정보증과 올림픽 유치를 지지한다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다.²⁵⁾ 개최도시 자체만으로는 메가

23) 지하수위가 높거나 열은 느슨한 사질지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반의 지지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됨으로써 하수의 역류와 건물의 기울어짐, 매몰, 심지어는 붕괴를 가져오며, 이후 지반의 균일성이 약화되어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若松加壽江, 2011: 3~23).

24) 도쿄 액상화 예측도는 다음 URL을 참고.
<http://doboku.metro.tokyo.jp/start/03-jyouhou/ekijyouka/index.htm>.

25) 중앙정부들(미국조차도)은 자국의 도시들이 올림픽 유치활동을 꺼리는 것은 개최 원조를 위해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개최 도시에 보조한 금액은 각기 솔트레이크(2002년) 13억 달러, 애틀랜타(1996년) 6억 9백만 달러, LA(1984년) 7천 5백만 달러 등에 이른다고 한다(Burbank eds, 2001: 33).

이벤트 개최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998년 나가노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올림픽 개최비용 중 ‘국고 부담 50%’ 각의 결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가노 현에 대한 국고 보조는 실제로는 34.7%에 불과했기에 나가노의 재정문제로 이어졌고, 막대한 관리비와 낮은 활용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도쿄 도는 건전재정 지자체라는 자신감과 함께 올림픽 개최 준비기금(매년 천억 엔씩, 적립금 4천억 엔)을 내세웠다. 이렇듯이 2016년 도쿄 유치계획 중 실제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주요시설의 정비비를 포함해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은 1/2 이내로 하며, 새로운 시설의 관리·운영은 해당 지역의 책임과 부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회운영비는 입장료와 방송권 등으로 조달하고, 중앙정부의 경비는 정해진 경비의 합리화로 조달해 특별조치는 강구하지 않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7월 전국지사회를 시작으로 유치 결의가 시작되어, 9월 7일에는 지방6단체 회의(전국지사회,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전국시장회, 전국시의회의장회, 전국정촌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까지 전국적 동의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本部, 2010: 455). 그러나 2007년 9월 11일 도쿄의 올림픽유치의 지원을 각의(閣議)에서 승인했는데, 실제로 ‘지금보증’ 정도의 협력으로 도쿄 도 대부분의 비용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더구나 각의 승인 다음날인 9월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건강을 이유로 사임한 후, 매년 총리 교체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다. 2009년 8월 30일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생활정치’를 내세운 민주당이 이른바 50여 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²⁶⁾ 민주당은 전후 자민당 정권을 지탱해 온 ‘개발형국가’에

26) 일본판총합사회조사(일본판 JGSS, 2006년)의 분석 결과를 연구한 논문(김범수, 2009: 192)을 살펴보면, 자민당은 남성, 고령, 적은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층, 연 세대 소득수준이 상층, 이념적 성향은 보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남성, 고령, 큰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의식의 중상층, 중층, 중하층, 연 세대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매우 높지 않은 층에서, 그리고 이념적 성향이 약간 혁신적이거나 혁신적인 층에서 매우 높

서 벗어나 ‘복지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책들을 표방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이익배분을 도모하는 형태의 ‘민주당형 개발주의’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다(渡辺治ほか, 2010: 82).

실제로 개발에 대한 민주당의 ‘애매한 성격’은 올림픽 유치에도 반영되게 되었다. 2009년 7월 12일에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총127석 중 민주당 54석, 자민당은 38석, 공명당 23석, 공산당 8석, 도의회생활자네트워크 2석, 무소속 2석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 당시 도쿄 도의회 선거 쟁점은 도쿄 도가 1,000억 엔을 출자했으나 심각한 부실대출 문제를 안고 있는 ‘新은행도쿄’, 고농도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이전논란이 뜨거워지는 츠키지시장 문제, 그리고 자민당·공명당·민주당이 찬성하나 생활자네트워크와 공산당이 반대한 도쿄올림픽 세 가지였다.²⁷⁾ 즉, 민주당형 개발주의로 인해 도쿄올림픽 유치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했으나, 관련된 모든 쟁점을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도쿄 도의회 내에서도 IOC총회 참석도의원도 당초 15명에서 실제 10명으로 축소되면서 그다지 원활한 협력을 이루지 못했다.

2006년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도쿄에 올림픽은 필요 없다 네트(東京に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ネット)’를 설립했다. 2월 10일에는 ‘올림픽 필요 없다! 검증-도쿄유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집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2006년 5월에는 JOC회장에게 요망서를, 2007년 1월에는 도쿄 도유치추진본부에 각각 질문장을 제출했다. 11월 ‘2016년 도쿄올림픽 회장 예정지 견학 투어’에서는 올림픽 개최예정지를 둘러보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과 함께 환경, 안전, 재정 등 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았다(<사진 1>). 또한, 반대운동 그룹은 2009년 10월 2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IOC총회에 유치위원들을 비판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争点は新銀行・築地移轉・五輪…都議選,” 《讀賣新聞》, 2009년 7월 3일.

<사진 1> 반대 견학투어(2007년 11월, 촬영: 필자)



“<인터뷰 1> 이제 와서 도쿄에 올림픽 유치한다 해서, 일본과 도쿄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단기간 올림픽에 도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 도쿄 도의 재정문제만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루 빨리 올림픽 유치활동을 중지해서 복지와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이 도의회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도의회 바깥에서 시민운동의 형태로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후쿠시 요시코(福士敬子) 도의원 인터뷰, 2010년 8월 19일]

는 의미를 담아 각자 ‘사비’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IOC멤버나 광고책임자를 접촉했던 시카고의 올림픽 반대운동²⁸⁾과 연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인터뷰 1>).²⁹⁾ 올림픽을 향한 개발의 성장연합이 기성 정치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반면, 반올림픽운동의 ‘이벤트연합’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과 국경을 넘어 연대를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³⁰⁾

28) 시카고 反올림픽운동은 주택, 공원정비, 교육, 지역의료 등의 영역에 예산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운동은 2010년 12월 5일에 “가장 소중한 캠페인(Most Valuable Campaign)”으로 선정되었다(<http://www.nogameschicago.com/>).

29) “オリンピックいらない宣言・東京 NO OLYMPICS ANYWHERE!!,” 《News Letters(追加補正版)》, 2009.11.30 참고.

한편,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유치과정에서 총3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회(2007년 12월, 6천 명=도쿄 2천, 도쿄 이외 4천 명)는 전국 62%과 도쿄 60% 찬성이었다. 2회(2009년 1월, 3천 명=도쿄 1천 명, 도쿄 이외 2천 명)는 전국 70.2%, 도쿄 68.6%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유치찬성 40%, 반대 34%, 중립 27%이라는 통계를 70% 이상의 지지로 해석한 것이었다. 올림픽 유치활동 공식 지정 보도주관사였던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보수적인 산케이(産経)신문은 ‘유치찬성이 많다’고 해석해 보도했고, 이에 반대운동 시민그룹도 유치위원회 ‘인터넷’ 조사가 가진 표집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그룹은 2009년 3월 29일~4월 4일 사이에 전화조사(1천 명)를 실시했더니, 찬성 25%, 반대 21%, 어느 쪽도 아니다 17%, 무관심·기타 37%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도쿄 도와 시민그룹 사이에 올림픽 유치 지지율에 대한 공방이 오고가는 사이, IOC가 공표한 2009년에 평가위원보고서에서 일본의 낮은 국내지지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IOC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회)에서 2008년 2월(공표 6월)에 도쿄는 59%, 2009년 2월(공표 9월)에는 전국은 54.5%, 도쿄는 55.5%에 그쳤다. 결국 유치위원회는 2009년 4월 3차 조사에서 인터넷(3천 명), 전화(1천 명) 조사를 각기 실시했다. 인터넷 조사는 전국 72.6%, 도쿄 69.7%, 도외 74%, 전화조사는 전국 80.9%, 도쿄 73.5%, 도외 82.8%가 지지한다고 밝혔다(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本部, 2010: 536). 결과적으로 도쿄 도민들은 올림픽 유치활동에 대해서 대체로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채, 반신반의 하면서 일정한 관망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올림픽 유치과정의 문제점들 중에 주목해야 할 점은 유치조직의

30) 한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공론장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행위자로서 역할이 부재했다는 연구도 있다(한승백, 2010). 그러나 올림픽반대운동은 하나의 쟁점에 대한 연합이 형성, 혹은 약화되는 ‘이벤트연합’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연대의 확대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구했다고 지적했다. ‘올림픽현장 규칙 34’에 의하면 신청도시의 국내올림픽위원회가 신청도시의 활동 및 행위를 감독하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후보지가 도쿄로 결정되고 난 후 JOC와 함께 ‘도쿄올림픽위원회’라는 NPO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낳았다. 첫째, 올림픽에 대한 관리 관청의 조직과 감독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 실행위원회가 결합된 ‘강한 국가동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둘째,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고도 회계보고를 NPO회원에 한하여 년 1회 보고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올림픽 관련 기관들이 사용하는 재정의 많은 부분들이 ‘도세’임에도 불구하고, NPO법인화로 인해 ‘일반 도민들에 대한 보고의 의무’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즉, NPO법인의 관리관청이나 시정권고나 인허가 취소 권한 등도 모두 도쿄 도가 소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올림픽 유치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자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올림픽위원회와 기관에 재정지원(기부금)을 행하는 기업들이 다시 올림픽 관련 사업권을 획득하는 ‘성장연합’을 형성했던 것이다. 결국 고도성장기 이익유도형(pork-barrel) 도시계획 속에서 공공사업이 개발을 견인하는 구조가 21세기에 다시 재등장했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Sorensen, 2002: 273).

2) 남겨진 문제들: 막대한 유치경비와 개최지 토지처리?

2008년 1월 25항목으로 구성된 올림픽 신청파일을 IOC에 제출했고, 2009년 2월에는 도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재정보증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IOC총회에서 3회 투표 결과 개최도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선정되었다. IOC위원 106명 중 입후보(국가)도시의 위원과 자격정지, 결석, 무효표 등을 제외하고, 도쿄는 1회에서 22표(3위, 시카고 낙선), 2회에서 20표(3위)로 낙선, 최종 3회에서 마드리드(32)를 제치고 리우(66)가 승리했다(리우는 3번째 도전에 성공). 리우 유치위원장은 남미 젊은이들이 빈곤을 탈출해 남미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다. 그러나 2014년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남미 최초 개최’라는 의의보다는, 오히려 ‘남미’라는 ‘거대 시장’이 올림픽을 계기로 열릴 것이라는 상업주의적 기대가 훨씬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01년 IOC 총회에서 1회 투표에서 탈락했던 오사카의 2008년 올림픽 유치 때와 비교해, 도쿄의 유치활동이 정부와 스포츠계의 결속력을 이끌고,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의 목소리도 물론 있었다. IOC실사단계에서는 치안과 안전, 콤팩트한 대회와 도시정비, 공공교통 시스템의 효율과 접근권, 그리고 수준 높은 테크놀로지 등은 일본과 도쿄의 장점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5번째 경제대국, 선진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명료한 목표를 설정한 브라질은 시장의 영향력이 상업주의적인 기대감을 낳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일본은 낮은 국내 지지율과 함께 ‘다시 한 번 도쿄에서·환경올림픽’이라는 슬로건과 ‘성숙도시’라는 목표가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유치 선정 이후 공개된 IOC평가보고서는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2016년 도쿄올림픽을 향한 5년여의 유치과정이 좌절된 이후 올림픽 유치비용에 대한 검정작업과 올림픽 건설 예정지의 토지처리 등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남게 되었다. 먼저 비용의 규모만으로 볼 때 과거 2008년 올림픽 유치에 좌절했던 오사카시의 유치비용 48억 엔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150억 엔)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표 2>). 도쿄 도의 막대한 유치비용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고, 올림픽 실패를 책임지고 도지사를 사퇴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시하라 도지사는 2009년 10월 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유효하게 사용해서 최선의 프레젠테이션’을 했기에 ‘괜찮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그동안 도쿄도가 열심히 고생해 가면서 재정재건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왔으며, 도쿄도가 본래 보유하고 있는 ‘잉여’의 부분을 유치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응해 나갔다.

그러나 공표액 150억 엔 중에 40억 엔의 민간자금이 기부한 법인의

<표 2> 올림픽(장애인 포함) 유치추진 활동경비

(2006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단위: 엔)

구 분		도쿄 도 실시분		유치위원회 실시분		
유치 경비	입후보파일 책정 등	20억 (21억)	계획안 작성 등	19억 (20억)	계획안 재검토, 결정 등	1억 (1억)
	국제유치활동	45억 (34억)	해외PR활동, IOC평가위원회 대응 등	23억 (11억)	프로모션 활동 등	22억 (23억)
	계	65억 (55억)	계	42억 (31억)	계	23억 (24억)
유치 경비 운동	유치 기운 고조, 광고 등	84억 (95억)	다른 자치체와의 연대 등	33억 (44억)	전국캠페인 등	51억 중 (51억) 보조금 25억(25억)
합 계		149억 (150억)	75억 (75억)		74억(중 도보조금 25억) (75억)(25억)	

* ()은 당초예정금액(2008년 2월에 발행된 「도쿄 도예산안의 개요」에 기재).

출처: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誘致委員会(2010: 317).

약 1/4 가량이 도쿄 도 관련단체로 되어 있는 등 경비내역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소수정당인 ‘일본공산당 도쿄 도의회의원단’은 「정보공개조례」에 기초해 얻은 공문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2009년 10월 26일 발표했는데, 도쿄 도 직원들의 해외 파견이나 국내 이벤트 등에 들어간 비용항목은 도쿄 도의 공비가 100억 엔이나 투입되었다고 비판했다. 도쿄 도가 발표한 내역에 지사본국 부담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하면, 도쿄 도가 공표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약 200억 엔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경비 이외에도 약 50억 엔의 세입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 유치활동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치안대책’과 ‘사회교육 비용’이 감소했다는 일부의 비판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츠키지 시장 부지에 ‘올림픽미디어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많은 반대여론에 부딪히게 되었다. 도쿄 도 내에는 11개소 도쿄 도중앙소매시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츠키지 시장은 수도권 인구에게 공급되

는 수산물(일본 내 최대), 청과물(도쿄 내 2위), 양계류, 각종 가공류 등을 공급하는 ‘일본의 부역(日本の台所)’이라 불리는 시장이다. 그런데 1934년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와 석면(asbestos) 검출이라는 문제로 시끄러웠던 츠키지 시장에 대해서 도쿄 도는 임해부도심 도요스(豊洲)로 이전계획(2014년까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소매업 중심인 현재 시장의 재구조화 문제 등이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전지로 설정된 ‘도쿄가스공장’ 철거지인 도요스에서 지하수와 토양의 심각한 오염(벤젠, 시안화합물, 납, 비소 등)이 밝혀지면서 이전의 찬반의견은 더욱 거세졌다.

실제로 환경기준 1천 배에 이르는 벤젠이 검출되면서 도쿄 도는 2007년 11월 발표에서 뒤늦게 670억 엔 규모의 토양오염대책이라는 수습책을 내놓기도 했다. 2008년 10월 31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도지사는 임해부도심 핵심시설들 중의 하나인 도쿄국제전시장 도쿄빅사이트(Tokyo Big Sight)에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는 변경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올림픽 유치 좌절로 계획들도 폐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이전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한 민주당 소속 도의회의원들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결국 2011년 3월 11일 도의회 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1표 차이(민주당 소속 의원의 이탈)로 이전계획은 가결되어 버렸다.³¹⁾ 예산은 약 288억 엔, 이전 관련 경비는 약 21억 엔에 이르는 시장 이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토양오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畑明郎, 2010).

2009년 10월 일본JOC 다케다 회장과 이시하라 도지사 역시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재도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욱이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3월 11일에 출마를 선언했던 이시하라 도지사는 2011년 4

31) ‘도쿄 도중앙소매시장 츠키지시장의 이전·재정비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하나와 도모후미(花輪智史)은 민주회파를 이탈한 뒤 무소속으로 이 이전 계획에 찬성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안은 찬성 63표 대 반대 62표의 1표 차이로 이전계획은 통과되기에 이르렀다(“築地市場関連予算が成立=14年度中の豊洲移轉目指す一都議會,” 《朝日新聞》, 2011년 3월 11일).

월 10일 선거에서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으며 4선에 성공했다. 4·24 통일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구청장과 구의회에서 자민당이 다시 약진해 민주당은 참패했다. 2011년 6월 17일 ‘제2회 도의회 정례회 지사 소신 표명’에서 ‘진재부흥(震災復興)’을 이념으로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재도전을 표명했다. 더불어 “본래 지방세 세수입인 법인사업세를 도쿄로부터 일방적으로 빼앗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인사업세의 ‘잠정조치’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³²⁾ 도쿄 도 동북부에서 가로질러 도쿄만으로 흘러가는 스미다(隅田) 강과 관련된 도쿄 도심의 구 지역과 관계자 단체들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지방단체, 행정 관계자들 등으로 구성된 ‘스미다가와르네상스협회’를 구성해 제1회 회의를 2011년 7월 6일에 개최했다. 아마도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활동은 도쿄 도의 물과 녹지라는 에도시대의 도시문화를 미래와 연관시키자는 ‘스미다가와 르네상스’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³³⁾

5. 저성장시대, 메가이벤트와 대도시권 네트워크의 변화

전후 일본 국내에서 개최된 참가자 100만 명 이상 규모의 (도시)이벤트들은 대략 1947~2006년까지 112건(만국박람회, 올림픽 등 포함)이나 된다. 60여 년간 적어도 110건 이상 평균 매년 2건에 가까운 수의 대규모 이벤트가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었던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시제(市制)

32) 2009년 10월 10일 히로시마·나가사키(廣島·長崎) 두 시장이 2020년 올림픽 유치구상(‘핵무기 폐기의 상징’)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부산-히로시마-나가사키-후쿠오카’를 잇는 공동개최의 가능성(大島裕史, 2009)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IOC에 의해 공동개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히로시마市 단독 개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결국 전면 백지화되기도 했다.

33) 물과 녹지를 연계한 ‘한강르네상스(Blue-Green Network 구축)’(박현찬, 2009)처럼, ‘스미다가와르네상스’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비판적 거리두기와 비교연구 협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100주년 기념해'인 1989년을 정점으로, 참가자수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이벤트 수가 전국 각지에서 16군데에 이르렀다. 1986년 12월부터 1991년 2월까지 4년 3개월(51개월)간 '버블경기'가 한창일 때 개최-기획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과거 호경기와 대규모 이벤트들이 상호 보완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일본이벤트산업진흥협회'가 설립되어 '저관엑스포제도'를 설치한 이후에는 지자체들의 지원과 심사를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박람회 제도로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버블붕괴 이후 일본은 많은 이벤트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宮木宗治, 2008).

2000년 이후 일본사회는 축소사회 레토릭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거대도시권의 재생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 담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세계화 영향 하에서 일본의 도시정부들은 인구축소와 경제적 정체를 경험하면서 '도시경쟁력'이야말로 정책 표상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의 현실은 내발적 발전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개발주체가 형성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더불어 외국인 이민 등도 수용해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지속적 경제성장의 꿈이 붕괴된 포스트 개발 시대임에도, 일본의 도시들은 이제껏 힘을 발휘해 왔던 도시재개발로 다시금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도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재개발로 인한 재정과 탄이나 메가이벤트 개최의 부작용이 매우 '가시화'되면서 이슈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도쿄 도와 같은 거대도시들은 막대한 재정 규모가 가진 도시의 수용력으로 인해서, 도시재개발을 향한 '성장연합'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대항담론의 형성에도 다양한 연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도쿄 도는 국가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 더 정확히는 '도쿄 도심'의 도시재생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하라 도정 3기의 정책목표의 핵심이었던 2016년 올림픽 유치활동은 과거의 올림픽과 도시개발의 모델을 통해 이익유도형 정치

를 반복했다. 그러나 도내와 외부 모두에서 사회통합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정책적인 공조에 일정한 균열을 지닌 채, 글로벌한 경쟁에서는 보다 넓은 시장가능성의 상업적 기대가 높은 브라질 리우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은 일체감을 일시적으로 양성하고, 동원해가는 과거 고도성장시대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재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른바 ‘포스트3·11’ 시대에 진재부흥과 복구가 한창인 일본의 미래가 과거의 ‘토건국가’로의 경로의존적인 ‘신자유주의’인지, 아니면 ‘신복지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본지반공학회는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 도쿄만 연안에서 ‘액상화’가 확인된 면적만 적어도 약 42km²로 세계 최대(도쿄돔 900개분, 뉴질랜드 지진 34m² 초과, 고베대지진의 약 4배 이상)라고 발표했다. 향후 30년 이내에 도쿄권에 직하형(直下型) 지진의 발생확률은 공식적으로 약 70% 이상이라고 한다. 올해 4월 22일 도쿄 도 정례회에서 이시하라 도지사는 일부 수도기능(증권시장 등)을 분산할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수도의 백업(backup)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3대도시권(大阪府·愛知縣) 지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리니어중앙신칸센’(도쿄-나고야권은 40분, 도쿄-오사카권은 67분으로 연결)이 완공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권역별 연결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한,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한국 김해로 이전시킨 것처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움직임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 대도시권의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의 구조뿐만 아니라, 동북아대도시권 네트워크인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region)’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Scott, eds., 2001).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란 신체의 실감이자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생활의 장소’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커뮤니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생활에서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정책과 아젠다가 형성되어야만 폭넓은 지지와 동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메가이벤트 유치 및 개최과정에서 보다 통합적인 도시재생으로 결합되기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시연구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대가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문화도시 건설을 표방한 워터프런트 개발계획(한강르네상스)이나 지방도시의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이벤트(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대한 비교의 관점도 제시해 보았다. 21세기 저성장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도시재생과 메가이벤트들이 갖는 정치경제적 역동성과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 Abstract

The Setback of Tokyo bid for the 2016 Summer Olympics
and the Urban Political Economy

Kim, Eun-Hye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setback of Tokyo's bid for the 2016 Summer Olympic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olitical economy.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TMGG) with policy goal of 'global city', it claimed to support the 'The Mature city' to host the Olympic games joining with the urban regeneration. TMGG publicly announced 'Green·Compact·finance' as the slogan of the 2016 Olympic with a pla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costing one trillion Yen, it was far from what can promote inclusive urban regeneration. The 2016 hosting activities over-emphasize the urban competitiveness and Tokyo 23 wards' gentrification, justified the urban polarization. TMGG repe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rowth coalition' based on the pork-barrel politics in the previous high-growth era, while the civil society responded to this with an emphasis on life politics and 'event coalition'. On the contrary of the slogan, the 2016 hosting activities and plan exposed some problems: the pollution and the safety of reclaimed land, the increase of the cost of equipment, and the excessive official expenditures. Even after the failure in the 2016 Olympic bids, TMGG has recently expressed its interest in the bid for the 2020 Olympics by proposing a slogan of 'Japan's recovery' from 3·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This paper tries to speculate how the mega-events would change the networks of the global city-regions in the fierce competition of cities in the 21st century.

Keywords: Olympic(host·candidate) cities, global city, growth coalition, event coalition

참고문헌

1. 자료

-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本部. 2010. 『2016年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會招致活動報告書』. 特定非營利活動法人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委員會.
- 東京オリンピック基本構想懇談會. 2006. 『東京オリンピックの實現に向けて(平成18年2月)』. 東京都
- 東京に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ネット. 2007. 『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 2016東京誘致を検証する』.
- 東京都. 2007. 『東京都観光産業振興プラン: 活力と風格ある世界都市・東京をめざして』. 東京都
- _____. 2008. 『都政2008』. 東京都
- 東京都防災會議地震部會. 2006. 『首都直下地震による東京の被害想定(最終報告) II 資料編』. 東京都
- 東京都財務局. 2009. 『東京都の財政』. 東京都
- 東京都港湾審議會. 2005. 『「中央防波堤内側海の森(仮称)構想(審議會答申)」』. 東京都

2. 단행본

- Bernstock, P. 2009. “12 London 2012 and the Regeneration Game.” G. Poynter and I. MacRury(eds.). *Olympic Cities: 2012 and the Remaking of London*. London: Ashgate.
- Burbank, M. G. Andranovich and C. Heying. 2001. *Olympic Dreams: The Impact of Mega-events on Local Politics*. New York: Lynne Rienner Publishers.
- Coaffee, J. 2011. “Urban Regeneration and Renewal.” Gold, J. & Gold, M. (eds). *Olympic Cities: City Agendas, Planning and the World's Games, 1896-2016*. 2nd New York: Routledge.
- Donatella, della Porta and S. Tarrow (eds). 2005. *Transnational Protest and Global Activism*.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Lenskyj, H. 2008. “Chapter3 Olympic Impacts on Bid and Host Cities.” *Olympic Industry Resistance: Challenging Olympic Power and Propagand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ogan, J. and H. L. Molotch. 200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20th anniversary edi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reuss, H. 2004. “7. Investment and the Reconstruction of a City: Burdens and Opportunities.” *The Economics of Staging the Olympics: A Comparison of the Games, 1972-2008*.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E. Elgar.

- Roche, M. 2000. *Mega events Modernity: Olympics and Expos in the Growth of Global Culture*. London: Routledge.
- Sassen, S. 200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2nd ed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ott, A. ed. 2001.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rensen, A. 2002. *The Making of Urban Japan: Cities and Planning from Edo to the twenty-first Century*, updated edi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Tarrow, T. 2005. *The New Transnational Activism*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加茂利男. 2005. 『世界都市: 「都市再生」の時代の中で』. 東京: 有斐閣.
- 大島裕史. 2009. 「2016東京五輪誘致失敗は平昌、釜山の五輪誘致にとってどんな意味をもつのか」. 杉山 茂・岡崎満義・上柿和生 編. 『スポーツアドバンテージ・ブックレット 4-2016東京オリンピック招致失敗で変わる日本のスポーツ』. 東京: 創文企画.
- 渡辺治ほか. 2009. 『新自由主義か新福祉國家か: 民主党政権下の日本の行方』. 東京: 旬報社. 이유헌 역. 2010. 『기로에 선 일본: 민주당 정권,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 국가인가?』. 메이데이).
- 上山和雄. 2009. 「第2章 東京オリンピックと澁谷, 東京」. 老川慶喜編. 『東京オリンピックの社會經濟史』(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石塚裕道. 1986. 「8 1000万都市・東京」. 石塚裕道・成田龍一. 『東京都の百年』. 東京: 山川出版社.
- 若松加壽江. 2011. 『日本の液狀化履歴マップ745-2008』.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遠藤雅彦. 2008. 『東京マラソン』. 東京: ベースボールマガジン社.
- 町村敬志. 2006. 「第1章グローバル化と都市空間の再編: 複數化していく経路への視点」. 似田貝香門・矢澤澄子・吉原直樹編. 『越境する都市とガバナンス』.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 八田達夫編. 2006. 『都心回歸の經濟學: 集積の利益の實証分析』.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片木篤. 2010. 「補遺 第31回 オリンピック大會(2016年)招致、新たな「水の手」開發の一環として」. 『オリンピック・シティ東京1940・1964』. 東京: 河出書房新社.
- 平本一雄. 2000. 『臨海副都心物語: 「お台場」をめぐる政治經濟力學』. 東京: 中央公論新社.

3. 논문 및 보고서

- 김범수. 2009.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층 비교: 최근 추이와 사회경제적·정치적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8(3).

- 김은혜. 2010. 「도쿄 도시레짐과 에다가와조선학교의 역사」. 《사회와 역사》, 85.
- _____. 2011. 「서평 『도쿄올림픽의 사회경제사』: 고도성장의 노스텔지어」. 老川慶喜 編(2009). 『東京オリンピックの社會經濟史』.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도시연구: 역사, 사회, 문화》, 4.
- 남상우. 2007. 「평창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정보도와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5).
- 박세훈. 2004.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발전국가의 구조변화와 도시개발정책」. 《국토계획》, 39(2).
- 박현찬. 2009. 「한강지천의 르네상스: 물을 매개로 한 도시기능의 활성화 방안」. 《SDI정책리포트》, 50.
- 서세훈·박현욱·임태성. 2010.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대한 비정부단체(NGO)의 정책 변화 메커니즘 분석: 옹호연합모형(ACF)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9(6).
- 윤일성. 1997. 「시장주도적 도시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영국 도클랜드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1).
- 이지원. 1999. 「현대 일본의 자치체개혁운동: 혁신자치체와 시빌미니멈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승백. 2010.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공론장을 통해 나타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1).
- Boykoff, J. 2011. "The Anti-Olympics." *New Left Review*, 67.
- Gotham, K. F. 2011. "Resisting Urban Spectacle: The 1984 Louisiana World Exposition and the Contradictions of Mega Events." *Urban Studies*, 48(1).
- フォーラム福岡. 2006. 「財政面「福岡五輪」は節約型--成長戦略で生み出す財政余力がカギ(特集:オリンピックを福岡・九州へ)」. 《フォーラム福岡》, 10.
- 江澤正雄. 2007. 「かしこいの皆様へ: 「長野冬季オリンピック」からの伝言(オリンピック知らない人たちネットワーク)」. 東京にオリンピックは知らないネット. 《オリンピック知らない: 2016東京誘致を検証する》.
- 皆川健一. 2008. 「地方と都市の共生に向けた財政力格差の是正: 地方法人二税の偏在是正と平成20年度地方財政対策」. 《立法と調査》.
- 宮木宗治. 2008. 「都市政策における大規模イベントの新たな大規模イベントの都市経営における意義: 海外の事例から(特集 大規模イベントと都市経営)」. 《都市問題研究》, 60(11).
- 米山秀隆. 2002. 「研究レポート No.132: 都心回帰と都市再生: 東京の再生を目指して」. 富士通総研.
- 砂原庸介. 2009. 「巨大事業の継続と見直しにみる地方政府の政策選擇: 臨海副都心開發の事例分析」. 《大阪市立大學法學雜誌》, 56(2).

- 三島富茂. 2009. 「臨海副都心開發の変遷と課題(特集 東京臨海副都心開發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地域開發》, 538.
- 安藤忠雄. 2007. 「基調講演: 10年後の東京」.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日經コンストラクション(12月26日号)》.
- 奥田裕之. 2009. 「東京臨海副都心開發に関する年表(特集 東京臨海副都心開發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地域開發》, 538.
- 伊藤久雄. 2009. 「國際・國內ネットワークと臨海部(特集 東京臨海副都心開發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地域開發》, 538.
- 畑明郎. 2010. 「築地市場の豊洲移轉問題-深刻な土壤汚染、不十分な調査・對策(特集 土壤汚染對策の現状と法的枠組み)」. 《都市問題》, 101(8).
- 田中耕市. 2008. 「1990年代の東京23區における都市密度變化と土地利用轉換: 事務所建築物と集合住宅を對象として」. 東京地學協會. 《地學雜誌》, 117(2).
- 町村敬志. 2007. 「メガ・イベントと都市空間-第二ラウンドの「東京オリンピック」の歴史的意味を考える」. 《スポーツ社會學研究》, 15.
- _____. 2008. 「メガ・イベントと都市開發-「時代遅れ」か「時代先取り」か(特集 大規模イベントと都市經營)」. 《都市問題研究》, 60(11).
- 町村敬志・平山洋介. 2009. 「對談: 目標を見失った都市・東京, 特集: 東京都政も轉換を!-「石原時代」の終焉」. 《世界》, 798.
- 川相典雄. 2005. 「大都市圏中心都市の人口移動と都心回歸」. 攝南大學經營情報學部論集. 《經營情報研究》, 13(1).

4. 관련 URL

2010廣島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市民ネット

<http://hiroshima-net.org/no-olympic/> (2011-06-12)

フォーラム福岡 http://www.forum-fukuoka.com/olympic/10_2025/ (2011-06-12)

リニア中央新幹線 <http://www.linear-chuo-shinkansen-cpf.gr.jp/index.html> (2011-04-22)

讀賣新聞(올림픽유치기획·연재기사 345건)

<http://www.yomiuri.co.jp/sports/feature/syouchi/> (2011-03-25)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本部

<http://www.shochi-honbu.metro.tokyo.jp/> (2011-03-25)

東京に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ネット

<http://www.ne.jp/asahi/no-olympic/tokyo2016/> (2011-03-25)

東京の液状化予測 <http://doboku.metro.tokyo.jp/start/03-jyouhou/ekijyouka/index.htm>
(2011-06-03)

東京都中央卸賣市場 <http://www.shijou.metro.tokyo.jp/> (2010-11-10)

西日本新聞 福岡五輪 <http://www.nishinippon.co.jp/nnp/local/fukuoka/fukuokagorin/>

(2011-03-25)

海の森 <http://www.uminomori.metro.tokyo.jp/> (2011-05-31)